

# 생활SOC 정책에 대한 건설 산업의 대응 방안

- I. 서론
- II. 생활SOC의 개념과 의의
- III.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IV. 건설 산업의 대응 방안
- V. 결론

## I. 서론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제35조제1항)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국토계획이 달성해야 할 3대 가치 중 하나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가 공간(이 제공하는 편의)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아파트 거주자(81.2%)가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67.1%)보다 14.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격차는 10년 전 12.1%p였던 것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농촌 주거지에서는 변변한 생활체육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18.8.27)」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도에만 8.7조원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 발표는 과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SOC에서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SOC로의 투자방향 전환이 필요함

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생활SOC 사업은 비록 중·소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기는 하나, 2020년 한 해에만 전체 SOC 예산 23조 2천억 원의 약 45%에 달하는 10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건설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활SOC 투자는 한편으론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활SOC 정책에 대한 건설 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활SOC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한 뒤, 건설 산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생활SOC의 개념과 의의

### 1. 생활SOC의 개념

생활SOC는 '생활'과 'SOC'의 합성어다. 여기서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직접 생산 활동에 동원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각종 시설(서비스)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현행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53개 사회기반시설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그 대상도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기반 시설(도로, 철도, 항만, 댐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사회기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후자에 해당하는 생활기반시설이 정부에서 제시한 생활SOC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무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SOC의 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게다가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생활SOC가 기존의 SOC와 차별되는 부분은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생활SOC 확충이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물론 모든 SOC가 사람들이 잘살기 위해 건설된다는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SOC 사업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SOC 사업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생활SOC 사업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료 : 구형수 외, 2019.

그림 1 | 종래의 SOC와 생활SOC의 비교

## 2. 생활SOC 정책 추진의 의의

정부가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생활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활SOC는 시장 논리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되는 소수의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간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같이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역 간 공급 격차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소득 수준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과도 부합된다. 이미 OECD, World Bank, UN-Habitat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해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SOC 스톡이 이미 상당 수준 축적되었다는 판단으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SOC 투자를 줄여왔다. 당시 공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아도 SOC 예산이 전년보다 2.3% 줄어든 18조 5천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었다. 이런 정책기조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7년 3/4분기 이후 비수도권의 일자리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청년층이 유출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2018년 10월에 발표한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각각 1,500㎡에서 3,000㎡,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지방자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거나 지상공간에 생활SOC를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셋째, 도심의 노후청사를 재개발할 때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생활 SOC를 포함하는 선도사업(舊부산남부경찰서, 舊충남지방경찰청, 舊천안지

원·지청 등 3건)을 추진하는 등 생활SOC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III.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1. 정책의 추진 현황

##### (1) 생활SOC 3개년 계획

2019년 4월에는 생활SOC 추진단(국무조정실)에서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SOC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 향후 3년 간 생활SOC 정책의 추진방향

구분	기존방식	향후방향
계획주체	중앙이 계획 / 지방이 응모	지역이 계획 / 중앙이 지원
고려요소	효율성·이용수요	삶의 질·지역균형
공급지역	중심지역	서비스 소외지역
추진방식	부처별·시설별 단절적 추진	범정부적 통합적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a.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은 지역의 창의성을 적극 장려·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가 높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때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확충하되, 노후화된 기존시설은 리모델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프로세스를 거쳐 여러 시설을 한 번에 공급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투자 범위는 2018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에서 192개 사업을 토대로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거나, 밀접한 사업은 새롭게 추가하는 재조정 과정을 거쳐 총 144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이를 보면 문화·체육·복지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 이전에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일상생활과 밀

접한 안전 분야도 투자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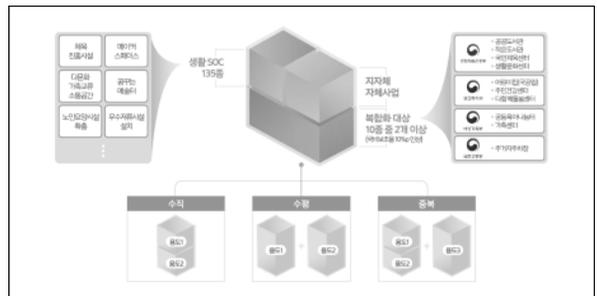
표 2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투자 대상 사업

구분	추진 목표	핵심 사업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쉼터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3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여촌뉴딜)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6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a.

#### (3) 생활SOC 복합화사업

2019년 6월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여기서는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도 현행대비 10%p 인상해준다. 이는 그동안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각종 생활SOC 관련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 : 구형수 외, 2019.

그림 2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복합화 대상 10종 시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간 복합화를 추진하거나, 이들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10종 시설은 생활SOC와 관련된 22개 부처의 149개 사업을 검토하여 부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추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유형이 돌봄, 체육, 문화, 복합플랫폼의 4가지로 구분된다.

2019년에 시행된 1차 사업 공모에서는 172개 지자체의 289개 대상지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894개로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국비 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약 8천 504억 원이 지원된다.

표 3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유형

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주 기능 시설
① 돌봄	고령화 및 돌봄 수요대응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② 체육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 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③ 문화	문화 중심 지역자치 기반 구축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④ 복합	소통협력 기반 사회·혁신 활성화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b.

올해 2월에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

하였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질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2. 정책 현안과 과제

### (1) 정책의 대상 범위 확대

현재 설정된 생활SOC의 범위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다양한 부처 사업을 하나의 추진 체계로 묶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대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SOC 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에서는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등 새로운 유형의 생활SOC도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후폐이성 우한에 1만 3천여 개의 병상을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 여건이 급변하면서 예기치 않게 생활SOC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8년 8월 정부 발표에 포함되었던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인프라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외되었는데, 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활SOC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스마트시티, IoT 도시 관리 등의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공모하는 사업부터 기존의 복합화 대상 10종 시설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로컬 푸드(local food) 복합 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신설되는 약 70개의 초·중·고등학교를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와 결합한 ‘학교공원’ 형태로 짓거나, 공공주택 단지 안에 생활형 SOC 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여전히 생활SOC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자체가 향후 수정이 가능한 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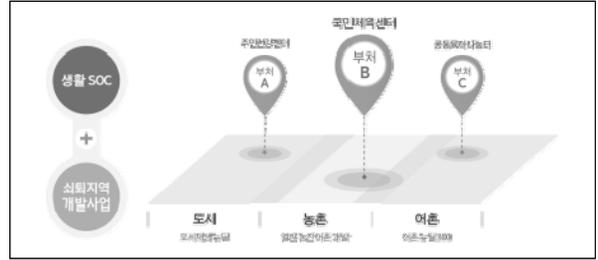
링플랜(rolling plan)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투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 달성

생활SOC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비록 복합화 사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달성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이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지역단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기능적 연계가 효과적인 여러 생활SOC 사이의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합시설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는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와 주요 생활SOC 사이를 예약제 기반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 같은 전통적인 SOC 사업을 동반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안에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에 287억 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쇠퇴·낙후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복합시설의 경우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쇠퇴·낙후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거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쇠퇴·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복합시설 부지를 사업구역 경계 안에 포함하고, 지역 내 자산과 복합시설을 연계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쇠퇴·낙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할 경우 대상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구형수 외, 2019.

그림 3 | 지역단위 개발사업과의 연계전략

### (3)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그동안 건설 분야에서는 댐, 하천 시설, 교량 등과 같이 전통적인 SOC의 노후화에 대해서만 심각성을 제기해왔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댐은 전체의 59.2%, 하천 시설은 전체의 15.8%, 교량은 전체의 6.3%가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활SOC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SOC가 많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정책은 기존의 방식과 차별되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비스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생활SOC를 공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이 있더라도 개보수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도 생활SOC를 공급할 때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SOC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수사항인 일부 부처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이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의 유휴 및 노후시설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효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복합시설을 건설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기존 시설을 폐지하는 등 시설 기능의 재배치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도 이번 기회를 노후화가 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IV. 건설 산업의 대응 방안

국내 건설업계는 올해 정부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불황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3조 2천억 원으로 2019년(19조 8천억 원) 대비 17.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이 18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2019년(15조 8천억 원) 대비 3조원이나 증액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되었다. 여기에 안전예산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SOC 개선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서 건설업계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201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생활SOC에만 전체 SOC 예산의 약 45%에 달하는 10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해 투입된 8조 7천억 원보다 20.7% 증가한 것으로서 비로소 10조 예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물론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특성상 이러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앞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

표 4 | 2020년 국토교통부의 SOC 투자 방향

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li> <li>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 등 재난·재해에 차질 없이 대응</li> </ul>
교통 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li> <li>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등 광역교통망 투자 확대</li> <li>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도입</li> </ul>
균형 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li> </ul>

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SOC 투자 확대</li> </ul>
혁신 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등 지원</li> <li>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및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li> </ul>

주 :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국토교통부, 2019.12.19. 보도자료.

#### V. 결론

정부의 생활SOC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도 크지만, 사업의 특성상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SOC의 신축 공사 물량은 많지 않고, 점차 민간 주도의 중소형 SOC의 유지보수 공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도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올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생활SOC 투자 확대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생활SOC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유형의 생활SOC 건설을 통해 첨단 건설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물결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건설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2018a.
2.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2018b.
3.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2019a.

4.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2019b.
5. 구형수, “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도시문제, 제600호, 2018.
6. 구형수, “생활 SOC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과제”, 국토, 제449호, 2019a.
7. 구형수,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9b.
8. 구형수·이다예·박정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2019.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위, 금년 9월말까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보도자료, 2019.6.1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보도자료, 2019.10.4.
11. 국토교통부,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보도자료, 2019.12.10.
12. 박철한·이홍일, “국내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투자의 향후 변화 추이,” 건설이슈포커스, 2016년 12월호, 2016.